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먹는 역사가 궁금해서

학교에서 우린 역사를 배운다. 대체로 왕조사, 정치사 중심이다. 누가 누구를 쳐서 멸망하고 새 왕조를 세웠네, 관료제도를 어떻게 정비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둘지 논의했네, 이런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다. 역사 공부를 하면서 나는 늘 '그 당시 사람들은 무얼 어떻게 먹었을까'하고 궁금해 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는 기록광(?)이었던 조선시대 위정자들은 어마어마한 분량의 실록과 여러 문서를 꼼꼼하게 남겼다. 어른이 되어서 알게 된 일이지만, 그런 기록만 살펴도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은 무얼 먹고 살았는지 얼추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최 역사책에서는 피비린내는 정치투쟁사는 자세히도 다루면서 이런 민중의 미시사는 거들떠도 안 본다. 이를 테면,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가 지금의 모습을 갖춘 건 언제부터인지, 두부와 콩나물은 어떻게 먹게 되었는지 학교 과정에 자세히 나온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부족한 지면에 다 실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어쩌면 정작 궁금한 건 우리 할배 할매들의 의식주 역사일지도 모르겠다.

예전에 최불암 선생을 만난 적이 있다. 그에게 '한국인의 밥상'에 왜 그리도 애착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대략 이런 말씀이 있었다.

"우리가 무얼 먹고 살았는지 후손들이 다 필름으로 볼 수 있게끔 의무감이 들더라고. 산골이나 도시 빌딩에서나 이 지방이나 저 지방이나 다 먹고 사는 게 일인데 이 프로가 그걸 기록하거든."

이런 음식사, 민중 미시사는 현장에 가지 않고는 알 수 없다. 한번은 인천의 오래된 닭튀김집(신포야채치킨)에 가서 주인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데 기막힌 얘기를 들었다. 요즘과 달리 주문만 하면 닭이 배달 오는 시절이 아니어서 1960년대부터 선친을 따라 산 닭을 사러 다녔다는 그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충청도에 가면 시골 마을에서 닭을 많이 길러요. 이걸 흥정해서 사오는데, 인천까지는 뱃길을 이용하곤 했지. 싸게 실을 수 있으니까요." 육로가 좋지 않고, 트럭도 형편없던 시대에 대형 화물은 바다와 강의 수로를 많이 이용했다. 이런 역사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역시 현장이다.

좋은 소고기를 파는 걸로 유명한 서울 팔판동의 식육점(팔판정육점) 사장님의 쇠고기 수집 방법도 지금처럼 포장된 고기가 경매로 팔리는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옛날이야기가 있다.

"전국 큰 우시장에 가서 소를 봅니다. 소 보는 기술이 있어야 해요. 덩치 크다고 좋은 고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노하우가 있어요. 엉덩이에 살집이 좋은 소라든가. 소가 마음에 들면 큰소리로 '이건 내가 골랐소'하고 점을 찍어요. 다른 이들이 붙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두부와 콩나물의 기억도 있다. 50년 전 서울 변두리라면 이런 재료는 대개 지역마다 공장이 있었던 것 같다. 두부공장집 아들, 콩나물공장집 딸이 동급생이고 그랬다. 두부공장은 아주 서늘했고, 큰 시멘트 수조 가득 두부가 열기를 식히고 있던 게 생각난다. 새벽에 노동자들이 두부를 쑤어 수조에 담가 식혀 동네 구멍가게와 시장에 납품했을 것이다. 그 두부 위로 찰랑찰랑하던 맑은 물의 흔들림이 아직도 선명하게 뇌리에 남아 있다.

그러던 동네 두부도 포장되어 납품하는 슈퍼마켓 두부에 밀려났던 역사도 여러분은 알 것이다. 집집마다, 물 맛따라 콩따라 다른 두부를 먹을 수 있는 시대는 사뭇 저물어버린 걸까.

봄이니 미나리도 각별한 추억으로 돋는다. 서울이라 해도 그때 변두리는 거의 반 농촌이라 동무들따라 동네 한 쪽에 가면 밭이 연이어 있었다. 개천 옆으로 둑이 있고 그 한쪽으로 물을 대는 밭에는 퍼런 미나리가 쑥쑥 자라고 있었다. 거기서 풍덩거리며 노는 게 좋았는데 거머리가 다리에 붙는 걸 보고는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물이 맑아 거머리도 살던 때가 서울 동네에서도 있었고, 자기 동네서 나는 미나리로 국 끓여 해장하고 나물도 무치던 게 그리 오래된 시절도 아닌 것 같아 왠지 더 억울하고 서글프다.

마침 시장에 가니 그 퍼런 미나리의 후손들이 그 색깔 그대로 잔뜩 나와 있다. 요즘은 삼겹살에 미나리 싸먹는 게 유행이라는데, 한 단 사서 먹어볼 작정이다.

〈음식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틀니가 불편하다면

이 원 표
조선대치과병원 치주과 교수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2024년 기준 처음으로 90세를 넘어섰다고 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남자 평균 수명은 86.7세, 여성은 90.7세로 5년 전 대비 각각 2.8세, 2.2세씩 늘어났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에 가까워지면서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특히 영구치는 상실 후에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잇몸과 치아가 약해지고 결국에는 치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빠진 치아를 방치하면 인접치에도 영향을 줘 치열이 무너지고 교합이 틀어질 수 있으며 저작기능 저하로 소화장애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 관리만 충실해도 발치까지 이어지지 않게 할 수 있다. 치은염이나 치주염 역시 그렇다. 구강 내 치아나 잇몸 주위의 플라그를 제때 없애지 못하면 치태와 치석으로 변하게 된다. 치석은 세균막이 쌓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염증을 유발하고 치은염 및 치주염과 같은 잇몸질환을 일으키므로 올바른 칫솔질과 함께 치과에서의 스켈링 및 잇몸치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제거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강관리가 옳게 시행되지 않으면 심각한 잇몸질환에 의해 치아가 탈락하거나 심하게 흔들리면서 발치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전체 치아가 상실된 무치악(전악 무치악)인 경우도 많은데 원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고 입술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다행히 치과 치료기술도 발전을 거듭하면서 전악임플란트나 틀니, 임플란트틀니 같은 방법으로 전악 무치악 상태도 개선이 가능하다. 틀니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 사람들이 전악 무치악 상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틀니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전악 무치악에 사용되는 틀니(완전 틀니)는 구강 내 고정할 부분이 없고 하악(아래턱)의 경우에는 혀에 의해 완전 틀니가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어 흔들리거나 수시로 탈락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상악(위턱) 틀니의 경우 입천장 전체를 덮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되며, 저작기능 시 잇몸으로 견뎌야 하기에 통증과 같은 불편감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잇몸에 얹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보니 저작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최근에는 전악 임플란트 같이 임플란트를 이용하는데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비슷한 저작력 및 심미성 회복이 가능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관리가 잘 이뤄질 경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치료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무치악 상태에서는 저작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반면에 전악 임플란트를 이용하면 음식물 섭취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전악 임플란트는 위턱 및 아래턱의 잇몸뼈에 각각 6~9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다른 부분에는 브릿지 형태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기 때문에 완전 틀니보다 저작력이 우수하다. 또한 부분적으로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전악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

식립할 부위 잇몸뼈 상태 및 임플란트 식립 각도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인의 구강 구조와 저작기능을 포함해 심미적 기능이나 이후 씹는 습관과 발음을 모두 고려하여 완벽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행히 최근에는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내비게이션 방식으로 임플란트(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진행할 수 있다.

구강 전체적으로 잇몸뼈가 많이 소실된 경우에는 이전에는 아무리 환자분이 경제적 여유와 의지가 있더라도 선택의 여지 없이 완전 틀니로의 구강기능 수복만 가능했다. 전악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구강 전체적으로 잇몸뼈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생체재료 및 턱뼈 재건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구강 전체적으로 소실된 잇몸뼈도 전신마취가 아닌 간단한 부분마취 상태에서 재건이 가능하게 되었다. 틀니의 여러 불편감 등으로 틀니에 거부감이 있는 환자라면 이러한 잇몸뼈 재건 및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전악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 고

국토교통부에 바라는 무안공항 비상대책

최 치 국
광주연구원 원장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에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이후에 정부가 마련한 항공 분야의 안전체계를 쇄신하는 대책이다. 정부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 공항에 대한 공항시설 정비, 항공사 정비·운영체계 개선,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무안공항 관련 대책은 전국 공항 안전대책 중에 하나로 다른 공항과 함께 종단안전구역과 방위각 시설 개선을 8월까지, 조류탐지레이더 시범 설치 등을 올 하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무안공항 운항 재개 시기는 관련 시설 개선 및 설치 이후에 운항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무안공항 운항 재개 시기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책은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는 전국 공항에 대한 안전대책이다.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전국 공항의 예방적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무안공항에 대한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원인 분석과 단기대책 마련, 나아가 중장기적인 대책까지 제시되어야 했다.

이러한 아쉬움 마음을 담아 몇 가지 대책을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국토교통부는 제대로 된 안전한 무안공항 운영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항안전의 핵심과제는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동남권의 가덕신공항 건설은 김해공항의 북측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고정 장애물(돗대산)로 인한 운영상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남권의 무안공항은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고정 장애물은 없으나 이동 장애물인 조류에 대한 안전대책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12·29 여객기 참사의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류충돌이 사고의 1차적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자세로 이동 장애물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무안공항 주변의 조류 서식지 및 이동경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체 서식지 조성 및 조류충돌 저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조류탐지레이더 시범운영, 인력기준 개선 등 운영 관리체계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제대로 된 안전한 공항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로 서남권의 글로벌 접근성을 확보하는 정부의 적극행정이 요구된다. 무안국제공항의 폐쇄로 서남권 주민은 물론이고 외국인의 글로벌 접근성은 차단되었다. 무안공항의 장기간 폐쇄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관광업계에 따르면 무안공항 폐쇄 초기 약 2개월 동안의 피해액만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공항 연간 예상 이용객 약 68만명(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이 타 공항 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 역시 약 813억원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서남권의 글로벌 접근성이 차단되었다고 느끼는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고립감이다. 따라서 서남권 국제선 이용객이 타 권역에 비해 적어서 다른 지역의 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논리로 무안공항 장기 폐쇄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남도의 동의하에 광주시가 제안한 무안공항 폐쇄 동안 기존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운항 계획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이 대형 참사를 당한 비상시기인데도 평상시의 국제선 임시취항 기준을 내세워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온 나라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아픔을 겪었고 아직도 희생자 유족은 사고 원인 조사 및 대책을 기다리면서 무안공항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서남권 항공 참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적극행정으로 무안공항의 종합 안전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고립감과 불편 해소를 위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社 說

'호남팔이' 두 총리… '내란연대' 부끄럽지 않나

'호남 몫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과 한덕수의 대선 연대가 호남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 '호남팔이'로 출세한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 민심을 저버리는 행보로 불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그제 서울에서 회동을 갖고 '반명(반 이재명) 개헌연대'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고문은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해 개헌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헌법 개정을 통해 정상국가로 갈 것이냐 입법 폭주를 통해 괴물국가로 갈 것이냐의 대결"이라며 "한 총리와 함께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했다.

연대의 명분은 개헌이라고 밝혔지만 입법 폭주로 괴물국가를 만드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에둘러 표현한 것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만은 막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 대표까지 역임한 사람이 민주당 대선 후보만은 안된다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남은 개인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치졸하기 그지없다.

정치인이 개인 감정으로 특정인은 안된다는 논리만 내세운다면 정계를 떠나야 할 때라고 한다. 이 고문의 논리가 딱 그렇다. 오죽했으면 김경수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 이 고문을 향해 "아무리 궁해도 그렇지 헌법 파괴범을 찾아가 개헌에 협력하겠다니 민주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비판했을까.

'이-한 연대'는 그들의 주장처럼 개헌연대가 아닌 내란연대에 다름 아니다. 한 후보는 계엄과 내란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데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였다. 호남팔이로 정치적 생명을 연명하려는 두 전직 총리의 후안무치에 모멸감마저 느낀다.

급증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망 확대 절실

가정의 달 5월이지만 가정이 더 두렵다는 사람들이 많다. 가족 간 이뤄지는 폭력 때문인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만 보더라도 광주는 급증세이고 전남도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가정폭력 건수를 보면 광주는 총 2만 8101건으로 연평균 5620건에 달했다. 2020년 4774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6306건으로 32%나 늘었다. 같은 기간 전남은 총 3만 6221건이 접수돼 연평균 7244건으로 5년 동안 꾸준하게 7000건 선을 유지하고 있다.

자녀를 상대로 한 부모의 폭력이 주를 이루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부부는 물론 부모와 자녀간 폭력도 늘고 있다. 폭력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성장한 후 부모를 폭행하는 '폭력의 대물림'이란 악순환은 가정폭력의 초기 개입 필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60대 여성이 과거 자신이 때렸던 딸(40대)로부터 요즘 폭행을 당해 상담을 받는 사례다.

가정폭력은 사회적 낙인을 우려해 숨기려는 경향이 강해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가 많다. 온정주의에 치우치기 쉬워 발견되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다. 지난 5년간 광주에선 4900여명, 전남에선 9000여명이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됐지만 실제 구속된 사람은 1% 수준에 그쳤다.

외부 노출이 어려운 가정폭력 특성상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 보호망 구축이 시급하다. 가정폭력을 해소하려면 빠른 초기 개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인지했다면 피해자를 신속하게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상담을 통해 트라우마 치료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쉼터 역할을 하는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이 광주와 전남 각각 4곳뿐이라니 부실한 피해자 보호망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無 等 鼓

'민생 체온계' 국고채

국고채는 단순한 채권이 아닌 국가 재정 건전성과 정책 신뢰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함께 시장금리를 결정짓는 '쌍두마차'로, 국민 생활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국채는 1949년 건국국채에서 출발해 1999년 정례화됐는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 신뢰를 판단하는 기준점으로 자리 잡았다.

국채,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지표인 국고채의 금리는 단순한 수급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세입 대책 없이 지출만 늘어나거나, 과도한 국채 발행이 이어질 경우 시장은 미래 상환 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되고 이는 곧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올 들어 국내외 경제 불안정 속에서 상승세를 보이던 국고채 금리가 지난달 말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행히 안정세로 접어든 듯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흐름을 '착시'라고 지적한다. 신뢰에 기반한 금리 하락이 아니라 글로벌 불안에 따른 '피난 수요'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언제든 국고채 금리가 다시 급등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경고도 나온다. 실제 지난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위험을 피하려는 외국인 자금이 한국 국채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피난 수요'를 타고 온 외국인이 4월 한 달간 3년물과 10년물 국고채 선물을 35조원 넘게 사들였고 가격이 뛰면서 3년물 금리는 2.26%까지 하락했다.

불안정한 국고채 금리 변화는 광주·전남 지역 경제에도 민감하게 작용한다.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세입계획 없는 확장 재정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진다면 국고채 금리는 다시 급등해 지역경제를 압박할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장금리가 반대로 오르면 중앙은행의 정책 효과는 무력화된다. 이른바 '정책 역설'이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경제 약자다.

경제계에선 국고채 금리를 '민생의 체온계'라고 한다. 요즘처럼 민생 체온이 불안정하게 오르내릴 때 그 원인을 신속히 진단·치료하지 않는다면 민생의 병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진표 경제부장 luck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